

보도설명자료

('22. 5. 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
(5.9일자 한국경제 「전기요금 결정권 전기쫓에 준다」 보도에 대한
설명)

1. 기사내용

- 새 정부는 산업부 장관의 전기요금 승인 권한을 전기위에 넘기고, 기재부와의 전기요금 사전협의 절차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
 -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사업법과 물가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새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·전문성 강화 등을 설정하였음. 다만,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

※ 문의 : 전력시장과 강경택 과장(044-203-3910) / 김형석 서기관(3906) / 류창환 사무관(3911)